

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

의결안건(제36-1호)



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[2021-2025]

2021. 1. 20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개요 및 경과	1
II. 제2차 기본계획 평가 및 대내외 환경분석	2
1. 제2차 기본계획 평가	2
① 주요 성과	2
② 한계 및 개선필요 사항	4
2. 대내외 환경 분석	5
① 대외 환경	5
② 대내 환경	6
3.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	7
III.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	8
1. 4대 전략목표별 추진과제	9
① 포용적 ODA	9
② 상생하는 ODA	12
③ 혁신적 ODA	15
④ 함께하는 ODA	18
2. 이행기반 공고화	21
① 지속성 :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	21
② 책무성 : 성과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	22
③ 효율성 : ODA 추진체계 혁신	23
IV. 제3차 국제개발협력 자원배분 방향	24
V. 향후 계획	27

I. 개요 및 경과

❖ 'ODA 선도 국가'를 향한 새로운 '중장기 정책방향' 설정

-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(제11조)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
 - 제2차 기본계획('16~'20년)이 완료됨에 따라 '21년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'21~'25년) 수립
- 한국은 '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가입 이후, ODA 정책 기반 마련과 양적·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
 - * 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 설치
 - ** ODA 규모(예산) : ('10년) 1.3조원 → ('20년) 3.4조원 / ODA 규모 세계 15위('19년)
 - OECD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('18년, DAC 동료검토)
- 제3차 기본계획('21~'25년)은 향후 5년간 ODA를 통해 지향하는 새로운 비전·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
 - 그간의 성과와 한계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

❖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ODA 주체 의견수렴·반영

- ODA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, 분야별·지역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3차 기본계획(안) 마련
 -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(1.13)에서 사전 검토

< 제3차 기본계획 의견수렴 과정 >

△ 관계기관 TF(5회) 및 분야별·지역별 전문가 자문단(20인) 운영 → △ BH 전문가 집담회('20.10.14) → △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 간담회(10.27) → △ 국회 토론회(11.9) → △ 대국민 공청회(11.19) → △ 관계부처 의견수렴(~'21.1.7)

표. 제2차 기본계획 평가 및 대내외 환경분석

1 제2차 기본계획 평가

1 주요 성과

❖ (정량) ODA 자원 규모 지속 확대, 분야별·지역별 목표 달성

- (ODA 규모) 재원확대 노력 지속 강화('15년 대비 '19년 32.6% 증가)
 - 최근 5년간('15~'19년) 우리 ODA 재원* 연평균 증가율은 7.3%로 OECD DAC 회원국 연평균 증가율(2.9%) 대비 약 2.5배 수준
 - * ODA 규모(순지출 기준, 백만불) : ('15) 1,915 → ('17) 2,201 → ('19) 2,540
 -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(11.9%)은 세계 1위(美 18%, 日 51%, 英 5.6%)
- (분야별 비율) 양·다자 및 유·무상 비율은 목표 수준 유지
 - 양자 69~75%, 다자 31~25%로 양·다자 비율 목표치 75:25 달성, 유상 36~39%, 무상 64~61%로 유·무상 비율 목표치 40:60 근접
 - * 양·다자 비율 : ('16) 69:31 → ('17) 73:27 → ('18) 74:26 → ('19) 75:25
 - ** 유·무상 비율 : ('16) 36:64 → ('17) 36:64 → ('18) 37:63 → ('19) 39:61
- (지역별 배분) 아시아 중심 지원 및 아프리카 비중 확대 목표 달성
 - 아시아(47~52%), 아프리카(25~27%), 중남미(9~12%) 순으로 아시아 중점 기조 유지, 아프리카 지원 비중*은 '15년(23%) 대비 '19년 3.4%p 증가
 - * 아프리카 ODA 비중 : ('15) 23.0%, ('16) 25.9%, ('17) 24.4%, ('18) 27.0%, ('19) 26.4%
- (소득그룹별) 최저개발국 지원 비중 유지, 최저개발국 지원시 무상원조 위주 지원 목표 달성
 - 최저개발국 대상 지원 비중은 '16~'19년 평균 36.1%로 1차 기본 계획 기간('11~'15년)의 평균인 36.7%와 유사한 수준 유지
 - * 최저개발국 대상 무상원조 비율은 56~59%로 유상원조 비율(41~44%) 상회

❖ (정성) DAC 중견공여국 입지 구축, 통합적 ODA 추진기반 마련

- (인도적 지원 강화) 인도적 지원 규모* 대폭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 위기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, 중견공여국으로서의 책임 이행
 - * 인도적지원 실적(약정 기준, 백만불) : ('15) 44.2 → ('17) 88.2 → ('19) 115.8
 -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·공약을 담은 '인도적 대협의(Grand Bargain)*'에 가입('20.3)
 - * 「취약국 지원전략」 수립('17.6) 및 「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전략」 개정('19.7) 병행
- (한국형 콘텐츠 지원) 원조를 받은 경험과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 성과 등을 토대로 선진국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·지원
 -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자문·컨설팅 사업(KSP, DEEP 등) 등이 개발 협력 성공사례로 평가, 수원국과 공여국을 연계하는 역할 수행
- (코로나19 위기 대응) 글로벌 위기 극복 지원 위해 「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」* 수립('20.7), 폭발적 수요에 대응한 신속지원 실시
 - * ▲보건·의료 역량 집중 ▲글로벌 협력 선도 ▲경제·사회 회복력 강화 ▲상생발전 생태계 구축
 - ▲120여개국 인도적 지원(0.9억불) 및 13개국 긴급차관(4.8억불) 등 총 5.7억불 지원, ▲수원국 맞춤형 방역경험 공유(800여건) 등
- (통합적 ODA 기반 구축)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전부개정*('20.11.27, 시행)으로 분절적 ODA 추진체계 혁신의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
 - *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, 주관기관의 소관분야 정책·사업 관리 강화
 - 사업간 연계·중복방지*('20년, 123건), ODA 정보공유시스템 구축('19년)
 - * 유무상 연계협의회('17년~),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('12년~), EDCF 관계기관협의회('17년~)
- (국제협력 강화) UN, OECD, GCF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, 다자기구·공여국과의 협력 강화* 등을 통한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
 - * 다자원조 규모(순지출 기준, 백만불) : ('15) 447 → ('17) 586 → ('19) 629
 - 다자기구 논의 주도*, 한-미('19.9)·한-호주('19.12) 개발협력 MOU 체결, CABI(중남미경제통합은행, '19.12) CEPI(감염병혁신연합, '20.11) 가입 등
 - * UN SDG10 우호국 그룹 의장('16~), OECD DAC 부의장('19~'21), GCF 이사진('19~'21) 등

2 한계 및 개선필요 사항

❖ (정량) ODA/GNI 비율 및 비구속성 비율은 목표치 미달성

- (ODA/GNI) '19년 ODA/GNI 비율*은 0.15%로 목표(0.18%) 미달성
* 실적 (목표, %) : ('17) **0.14** (0.16) → ('18) **0.14** (0.17) → ('19) **0.15** (0.18)
→ DAC 회원국 평균(0.3%) 감안, 향후 ODA 규모 지속 확대 필요
- (비구속성) 비구속성 비율*은 목표치(유상 55%, 무상 95%) 대비 저조
* 유상:무상 (%) : ('15) 44:85 → ('17) 44:88 → ('19) 49:87
→ 중견공여국 위상 및 국제사회 권고 등 감안, 비구속성 확대 필요

❖ (정성) 전략·기획 강화 및 성과관리 보완 필요, 생태계 구축 긴요

- (전략적 ODA) 종합전략 수립 및 기획 기능 부족,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-사업간 연계 강화 및 정책간 정합성 제고 필요
 - 신남방·신북방 ODA 확대* 등 대외전략과의 연계**는 강화되었으나, 민간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 연계성과 창출 배가 필요
* 규모(억원) : ('17) 7,175(南 5,867, 北 1,308) → ('20) 8,733(南 6,642, 北 2,091)
** 「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」('19.11월)시, 신남방 대표 5대 프로그램 발표
- (효과적 ODA) ODA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
 - ICT, 과학기술, 공공행정* 등 국제경쟁력 있는 모델 다양화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패키지 사업 기획·지원 필요
* (디지털정부) '20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, (전자조달) 열린정부파트너십 아프리카 大賞
 - 국민지지 확보 및 효율적 재원 활용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
- (함께하는 ODA) 공공(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) - 민간(시민사회·기업) - 연구기관(학계·연구소) 등 범국가적 협력 생태계 조성 미흡
 - 시민사회 협력 기반 구축*, 민관협력 사업 확대** 등 민간과의 협력은 강화되었으나, 개발협력 주체간 통합 협력체계 구축 필요
* 「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-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」 수립('19.1)
** 종합시행계획상 민관협력 사업 규모(억원) : ('15) 419 → ('20) 759 (81%↑)

1 대외 환경

- (글로벌 난제 확산)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, 기후변화* 및 자연재해 등 쏠지구적 도전과제로 인해 글로벌 연대·협력 및 국제공조 시급성 증대
 - * 기후변화로 인해 개도국 내 최대 1억명 이상의 빈곤층 발생 전망('16년, 세계은행)
- 위기 대응을 위한 ODA 수요* 지원과 함께 개도국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사회 복원을 통한 항구적 위기 대응역량 구축 지원 필요
 - * 코로나19 팬데믹 선언('20.3) 후 100여일만에 150여개국에서 방역물품 등 지원 요청
- (양극화 심화) 코로나19로 인한 빈곤율 상승*, 발전격차 확대로 상대적 빈곤도 심화, 신흥국은 중소득국 진입**, 분쟁취약국은 난민 증가
 - * '90년 이후 최초로 빈곤율 상승 전망, 일부 지역 30년전 수준 회귀 전망('20년, OXFAM)
 - ** 중소득국 수 : ('00) 40개국 → ('10) 50개국 → ('18) 56개국
- 비대면 문화 확산 및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 접근성 및 활용역량 차이에 따른 디지털 불평등 심화
- (SDGs 이행 강화)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채택('15년) 5년 경과, '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이행 가속화 요구 증대
 - SDGs 달성을 위한 재원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ODA 재원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*, 민간재원 활용 및 지원수단 다양화** 강조
 - * SDGs 달성에 연 \$2.5조 필요, '18년 ODA는 \$1,490억 규모('19년 UN 사무총장 특별보고서)
 - ** 비양허성 차관, 보증, 지분투자 등을 통해 민간투자 촉매제로서의 ODA 역할 제고
- (국익추구 경향) 자국 중심주의*가 확산되는 가운데, 공여국은 투자·무역 기회 확대 등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포괄적 국익 추구 강화**
 - * 글로벌 금융위기('08년) 이후 원조예산 지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자국 이익 강조
 - ** ▲(美) 원조전략 목표에 '안보적·경제적 이익' 포함, ▲(英) '개발협력 지출은 국익에 도움된다'는 논리 제시, ▲(濠) '무역을 위한 원조' 예산 비율을 20%로 결정
- 개발협력의 효과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 원조도 확산

2 대내 환경

- (ODA 역할 확대) 경험·외교·통상·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ODA 역할 확대로 정책통합성 확보 중요성 증가
 - * 「'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」(‘21.1), 「신남방정책 플러스」(‘20.11), 「포스트 코로나 시대, 신북방정책 전략과 국가별 협력방안」(‘20.6), 「Post 코로나 新통상전략」(‘20.7), 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」(‘20.12) 등에서 ODA가 중요한 부분 차지
 -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해 ODA-非ODA 정책간 연계 필요성 증가, ODA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유관분야와의 조율 노력 확대 필요
- (참여자 증가) ODA 수요 확대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공공(시행기관)* 및 민간(시민사회**·기업)의 역할 증대
 - * (‘15) 31개 기관 → (‘20) 41개 기관 / ** (KOICA) 80여개 시민단체와 지속 협력
 -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체계적 협력* 필요성 증가, 공공-민간의 활동 상호연계 등을 통해 시너지 창출 필요
 - * 미국(‘19)·호주(‘15) 등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, 개도국의 민간시장 발전에 기여
- (국민관심 증대) 통합적 ODA 추진기반 공고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* 기대 확산
 - * 기업의 해외진출, 투자·무역 확대,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연대·협력 선도 등
 -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능 강화* 등에 따른 ODA 효율성·투명성 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 등 혁신 필요
 - *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관·시행기관 및 시민사회·기업 등 지원 역할 수행
- (재정여건 악화) ODA 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 의지*는 확고하나, 정부재정 여건 악화가 제약요인으로 작용
 - * ▲ ‘17년 대비 ‘22년까지 아세안 무상 ODA 2배 이상 확대(한-아세안 정상회의, ‘18.11월)
▲ ‘19년 대비 ‘30년까지 ODA 규모 2배 이상 확대(G20 정상회의, ‘19.6.29)
 -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요 확대 전망에 따라 민간재원 참여방안 강구 등 ODA 재원 다각화 필요
 - * ‘20년 성장 전망(‘20.12, OECD) : (韓)△1.1%, (美)△3.7%, (日)△5.3%, (佛)△9.1%

❖ **지속가능개발의제 5P*의 이행방안 구체화를 통해 “글로벌 가치실현”**

* People(사람), Peace(평화), Prosperity(번영), Planet(지구), Partnership(파트너십)

❖ **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“상생의 국익 창출”**❖ **초국경 이슈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내외 ODA 주체간 “협력과 연대”**

- (포용적 ODA) 글로벌 현안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지원 강화, 인도적지원·기아종식 등 사람중심 개발협력 추진 → **People·Peace**
 -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·기초위생 역량 강화와 함께 분쟁·취약국 및 취약계층 지원, 식량지원·교육 등 기본적 삶 보장
- (상생하는 ODA) 개도국의 경제·사회발전과 동시에 공여국과의 공동번영을 통한 쏠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→ **Prosperity·Planet**
 - 개도국의 경제성장·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대외정책과 연계 추진
- (혁신적 ODA) 수원국의 과학기술 및 공공행정 혁신역량 강화 지원, 프로그램 다양화 및 민간재원 활용 등 경쟁력 확보 → **Innovation**
 - 디지털 뉴딜 ODA 추진, 과학기술·ICT 분야 혁신역량 강화 및 스타트업·사회적기업의 혁신기술 활용 및 민간재원 참여 확대
- (함께하는 ODA) 국내 개발협력 쏠주체(공공-민간-연구기관)간 연계·협력을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→ **Partnership**
 - 공공(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) - 민간(시민사회·기업) - 연구기관(학계·연구소)과의 범국가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기구·공여국과의 협력 고도화
- (이행기반 공고화)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, 성과관리 강화 등 책무성·투명성 제고, 추진체계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→ **Infra**

Ⅲ.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

비전

**협력과 연대를 통한
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**

전략 목표



중점 과제



이행 기반

개발협력 성과 제고 위한 체계 공고화



전략 1 포용적 ODA

① 글로벌 보건위협 대응 강화

□ 보건 ODA 규모 확대

-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보건 ODA 수요 급증에 대응, 보건 ODA 규모 지속 확대((‘20) 2,773억원 → (‘21) 3,358억원(21% ↑))
- 시민사회*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의 가용 총 역량 집중
 - * 시민사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0여개국 600억원 이상 지원 계획 발표(‘20.5월)

□ 종합적·체계적 감염병 대응

- 코로나19 대응 종합 ODA 전략인 「코로나19 대응 ODA 추진 전략」*(‘20.7.8)을 충실히 이행하여 글로벌 위기극복 선도
 - * △보건·의료 ODA 재원 대폭 확충 △보건·의료체계 구축 △감염병 예방환경 조성 △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△취약분야 인도적지원 강화 △그린·디지털 뉴딜 ODA 등
- ▲정책·행정, ▲예방·감시, ▲진단·검사, ▲치료·관리 분야별 수원국 수요 파악 및 수원국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사업 기획·지원

□ 보건·의료 체계 구축

- 방역물품·장비 지원을 넘어 필수 의약품·의료시설 지원, 보건의료 인력양성 등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항구적 대응역량 강화
- 수원국 환경에 부합하는 적정기술 개발 지원,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수 공공재인 감염병 치료제의 개도국 지원 검토
 - *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의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 필요(WHA 초청연설, 5.18)

□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

-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·하수도 개선 및 세수 시설 설치 등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 지원, 공중보건수칙 등 감염병 대응 인식 제고
 - * 개도국 수자원 관리를 위한 ODA 사업 지속 추진, WASH(Water, Sanitation and Hygiene, 깨끗한 물과 보건·위생 증진사업) 등 식수·위생 관리 종합 사업 확대

② 취약 분야 인도적 지원 확대

□ 인도적 지원 지속 확대

- 글로벌 인도적 위기 심화* 해소를 위해 인도적 지원** 지속 확대, 복합적이고 만성화되는 인도적 지원 수요에 적시 대응 추진

* '13~'18년, 유엔의 인도적지원 요청 규모는 연평균 증가율 15% 수준으로 지속 증가

** 인도적 지원 비중(%) : ('17) 3.4 → ('18) 4.6 → ('19) 4.5 → ('20) 4.9 → ('21) 5.2

□ 인도적지원 - 개발 - 평화간 연계(HDP Nexus)* 강화

* 인도적지원-개발-평화 간 연계를 통해 취약성을 완화하고, 갈등·분쟁 등 위험을 예방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평화 달성(OECD DAC 권고안, '19.2월)

- 분쟁·난민 등 인도적지원 수요 발생원인 해소 및 지원활동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「HDP 연계 이행전략」 마련 추진

- 국제사회의 분쟁예방 및 평화유지·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*하고, 우리정부의 평화유지 활동(PKO 등) 대상국에 ODA 지원 추진

* ▲'20년 유엔 PKO 분담금 전체 10위(DAC 공여국 중 8위) ▲유엔 평화유지군 병력 기여 30위권 ▲평화구축위원회(PBC) 활동 및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주최('21년) 등

□ 취약국·취약계층 지원 강화

- 만성적 재난*은 분쟁·취약국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자연재해 등 긴급 재난지원은 지역적 접근성 감안, 아·태 지역 중심 지원 검토

* 위기는 여전하나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'잊혀진 위기'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

- 아동·여성·난민 등 인도적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점 지원,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시 젠더 및 인권에 대한 고려 강화

□ 인도적 지원 효과성 제고

- 다년도 기여, 비지정 기여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등 UN 「인도적 대합의(Grand Bargain)」('20.2월 가입) 권고사항 준수

< 인도적 대합의(Grand Bargain) >

- ▶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·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여국과 인도적 지원 기구의 공약
 - △재정 투명성 제고 △수원국 내 단체에 대한 기여 확대 △현금지원 확대
 - △다년도 기여 확대 △비지정 기여 확대 △보고 의무 간소화

③ 인간의 삶의 질 향상

□ 기아 해소 및 지속가능 식량생산 지원

- 기후변화 및 글로벌 감염병에 따른 물류 장애 등으로 세계적 식량위기*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응, 식량(쌀) 지원 지속 추진**

* "3~6개월 안에 20개국이 식량 위기 직면 가능성"(유엔농업식량기구, '20.10월)

** 식량원조 성과 등 분석을 통해 향후 원조 규모 및 대상국 수 확대 등에 대한 방향성 검토

- 종합적 농촌개발* 및 수원국 맞춤형 스마트팜**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, 식량안보 및 영양상태 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

* ▲ 관개시설 확충 ▲ 농기계 보급 및 기술전수 ▲ 농산물 생산·가공·유통·판매 지원

** 농업역량 및 지역별 기후·정책적 특성 등 고려,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업 기획·보급

□ 재난재해 경감 및 대응 지원

-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후 신속지원(긴급구호) 뿐 아니라 재난위험 경감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예방적 노력 병행(국제사회 협력 강화)
- 재난·재해 등 국가·지역 단위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통합재해 관리 체계 구축 등 경험공유(공공행정 ODA)를 통해 대응역량 강화

* (예) 산불·산사태 대응·예방을 위한 글로벌 통합산림재해관리 사업 등

□ 교육 기본권 강화 기반 조성

- 소외계층 대상 문맹률 개선, 기초직업 교육을 통한 생계유지 지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
-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원격교육(e-러닝) 관련 수요 대응 및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원격교육 역량 강화* 지원

* 원격교육 기자재 지원 및 교원 ICT 활용역량 강화 등

- 개도국 대학과의 협력 등을 통해 수원국의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 교육훈련(TVET) 강화*,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** 지원

*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('12년~) 및 신남방·신북방 지역 고등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

**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(V-KIST) 설립사업,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사업 후속사업 등

전략 2 상생하는 ODA

1 경제·사회 발전기반 조성

□ 개도국 경제인프라 지원

-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수요(공항·철도·항만 등) 증대에 적극 대응하여 아세안·인도 등 수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
 - * 인도 최초의 EDCF사업(8억불) 추진 : 나그뿌르-뭄바이 고속도로 ITS 등 타당성조사 진행 중
- ICT 기술 기반의 교통시스템(ITS) 등 **高부가형 인프라 사업*** 지원 및 동남아 5개국** 등의 수원국 발전단계를 고려한 **도시화 사업** 추진
 - * 고속도로 통합관리 시스템(ITMS), 철도 신호시스템,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 구축 등
 - ** 한-동남아 5개국 개발협력 MOU 체결('19년, 5대 전략 프로그램 중 '스마트도시 개발' 포함)

□ 개도국 사회인프라 지원

- 개도국의 국가 개발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(통계역량 강화* 등) 및 경제혁신·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·제도 개선(공공행정 ODA** 지원)
 - * UN, OECD DAC 등 국제기구는 SDGs 이행전략 수립 및 성과 추적을 위해서 신뢰도 있는 데이터 생산·관리 역량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강조
 - ** 개도국의 법·제도 개선사업 및 행정시스템 구축 사업('21년, 2,196억원)
-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교육·보건·사회안전망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개도국 내 사회 불평등 해소 기여
- 개도국의 문화·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위해 수원국 문화 콘텐츠를 토대로 현지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* 추진
 - *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, 관광종합교육센터 건립, 관련 정책 자문 등

□ 인프라 지원 협업체계 강화

- 민간건설사 및 민자사업 경험 보유 공공기관과의 협업* 확대
 - * (예) 스마트시티 사업발굴 모델 : 정책자문 + LH공사(설계 및 운영) + EDCF(도로, 상수도 부대 인프라 지원) + 민간기업(도시 건설 및 ICT기술 제공)
- 현지 ODA 협의회*, 통합정책협의회 등 사업 기획·발굴 단계부터 관련 부처·기관이 참여하여 수원국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
 - * 재외공관장 주관, KOICA·수출입은행·KOFIH·KOPIA 등 ODA 사업 시행기관으로 구성

② 녹색 전환 선도

□ 기후변화 논의 선도 및 협력 강화

- 국제사회 新기후체제* 동참('21년~), P4G 정상회의('21년) 시 녹색 의제 주도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 선도

* 선진국뿐 아니라 195개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첫 세계적 기후합의로서 '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점에 이르는 '탄소중립'을 목표로 제시

- 글로벌녹색성장기구(GGGI) 및 녹색기후기금(GCF)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* 확대, MDB 사업과 유상사업의 연계 강화**

* UN 기후행동정상회의('19.9월)시 공약한 '20~'23년 중 GCF 공여액 2배 확대(1억불 → 2억불) 이행, GCF 인증기구 확대 추진을 통해 GCF와의 협력사업 확대

** EDCF-AfDB 협조융자(6억불, 에너지 분야, '21년) 활용, 그린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

□ 전략적 그린 뉴딜 ODA 추진

- 개도국 녹색전환·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그린 뉴딜 ODA* 비중**을 DAC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·추진

*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ODA

** (예시) 기후변화 완화·적응 목적의 사업으로 리우마커 표기가 된 사업 비중(총지출 기준, '14~'18년 평균) : (한국) 7%, (OECD DAC) 15.9%

- 수원국 맞춤형 그린 뉴딜 ODA 지원* 및 중소·중견기업이 그린 뉴딜 ODA 후속사업 수주 시 F/S 지원 등 사후지원 강화

* (상위중소득국) 노후화석연력 발전소의 친환경화 수요 → 그린에너지로 교체 지원
(하위중소득국) 전력공급 고효율화 수요 → 송배전망 안정화 지원 등

- 배터리·수소, 수자원·위생, 송·배전 효율화 등 우리의 우수한 기술 분야를 개도국 수요가 많은 분야와 연계한 융복합 ODA* 지원

* (예) 스마트팜 지원시 전력 안정화를 위해 태양광을 활용한 보조전력 장치 지원 등

□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

- 베트남·미얀마 등 개도국과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*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, 국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

* (목적) 온실가스 배출 저감·제거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역량강화

-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개선(산업·수송·발전 분야 등)을 위한 R&D 지원 및 법·제도개선 컨설팅 등 개도국의 대응능력 향상 추진

③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

□ ODA 전략사업과 대외정책의 조화

- ODA 전략과 대외정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하고, ODA 및 대외정책의 효과성 배가
 - *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원조-비원조정책 간 조정·조율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
- ODA 기획시 대외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빈곤퇴치 및 개도국 발전과 함께 기업 해외진출, 일자리 창출 등 성과도출

□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

- 「신남방정책 플러스」(20.11, 신남방특위)의 ‘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’을 중심으로 7개 이니셔티브* 이행 지원
 - * ①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, ② 인적개발 지원, ③ 문화교류 증진, ④ 무역투자 기반 구축, ⑤ 농어촌 및 도시 개발, ⑥ 미래산업 육성, ⑦ 비전통적 안보분야 협력
- 방역물품 및 방역 혁신기술 지원, 공공의료 행정체계 구축 지원 등 ‘사람중심’ 신남방정책 정신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협력 강화

□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

- 「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북방정책과 국가별 협력과제」(20.6, 북방경제협력위원회)의 4대 추진전략* 및 국가별 주요 협력방안 이행 지원
 - *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 강화, ② 평화·번영시대를 여는 경제협력 체계 마련, ③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, ④ 교류 저변 확대를 경험 촉진
- ICT 등 디지털 경험 기반 확대, 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 보건·의료 분야 협력, 스마트팜 및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

□ 정상급 외교 ODA 연계 지원

- 대통령·총리의 정상급 외교시 ODA를 연계·기획하여 의제화 함으로써 정상급 외교 성과 제고 및 ODA의 추진동력 확보
 - * (예) 한-메콩 정상회의(19.11월) 후속조치로 미얀마 한-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건립
- 정상급 외교 준비단계부터 대상국 수요조사 및 맞춤형 사업 기획·발굴, 전략사업비*를 활용하여 정상급 약속사업 신속 지원
 - * 대통령·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 이행을 위한 사업(21년, 65억원)

전략 3 혁신적 ODA

1 수원국 혁신역량 강화

□ 과학기술 혁신 지원

-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*, 과학기술정책 개선, 연구 역량·인프라** 강화,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참여 지원 등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제고

* 개도국 경제발전계획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

** 연구시설 이전 및 종합정보체계(과학기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) 구축 등

- 국내 R&D 성과와 ODA를 접목한 사업 확대, 수원국의 과학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* 및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** 개발 지원

* 연구결과 기업 매칭,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, 기술지주회사 설립,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

** 개도국 현지 환경에 적용 가능한 중간 기술((예) 휴대용 정수 빨대 등)

□ 디지털 격차 완화

- 격오지(도서·산간), 여성, 장애인 등 개도국 내 디지털 소외 지역·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구축* 지원

*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이동형 정보접근센터 및 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센터 구축 등

- 통신 및 인터넷 등 디지털 사회 기반 조성 지속

□ 디지털 뉴딜 ODA 추진

- 비대면 경제·문화 확산을 고려, 수원국 수요가 높은 사업(보건·방역, 교육, 교통, 농업 분야 등)에 우리 ICT 기술을 융합한 ODA 추진

* ▲ 의료정보시스템, 검역시스템 ▲ 원격교육 ▲ 스마트팜 등

- 수도이전, 지능형 교통망 구축 등 대형 스마트시티 사업 중점 추진

□ 공공행정 혁신 지원

- 비교우위가 있는 우리 행정 제도·시스템(조달·건강보험 시스템 등)에 대한 수원국 수요 증가에 대응, 공공행정 ODA 활성화*

* 현지 ODA 협의체, 통합정책협의회, 디지털정부 협력센터,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등 활용

- 국가별 맞춤형 디지털정부 추진계획 제안, 행정정보 디지털화부터 전자조달·무역 시스템 구축 등까지 단계별 체계적 지원

2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

□ 혁신적 사업 모델 개발

- 스타트업·소셜벤처 및 사회적 기업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우리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

* (예) ▲아프리카 지역 태블릿 기반 개도국 아동교육 앱 확산 사업 ▲탄자니아 에듀테인먼트 비즈니스 구축 사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과 연계한 사업

- 개도국 현지 지역사회와 연대 형성이 가능한 사업 모델*을 개발, 개도국 지역사회의 선순환 사회·경제구조 창출에 기여

* (예) 사회적경제기업(카페) + 현지 NGO(바리스타 교육) → 개도국 내 장애인 고용 창출, 현지 정부(관광인프라 구축) + 주민 공동체(사업운영) →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일자리 창출

□ 사업지원 방식 혁신

- 정부(유·무상) - 시민사회 - 기업(해외투자) 활동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* 기획을 통해 수원국 수요 효율적 대응 및 각 주체의 장점 활용

* (예) ▲(유상)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▲(무상) 진단키트 지원, 검사인력 역량강화 ▲(기업)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▲(시민사회) 기초위생 인식제고

- 수원국의 긴급수요에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유·무상 ODA 사업 심사·승인기간* 단축 등 제도개선 및 신속지원 가능 예산 확대

* 사업기획부터 집행까지 통상 무상사업은 2년, 유상사업은 4~6년 소요

- 수원국 요청사업 외에도 수원국 환경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수원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·제안

- 비대면화에 대응하여 초청연수 등 인적교류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원격연수 및 화상회의 보완 등 사업방식 전환

□ 새로운 ODA 콘텐츠 개발

- 개도국의 경제·행정 체계, 인력·기술 현황, 국가재정, ICT 기반 등을 감안, 수원국 현지상황에 맞는 ODA 모델 재창조

- 수원국과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문화 콘텐츠 제작기술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등 개발

③ 개발협력 자원 다양화

□ 민간자원 활용 확대

- 정부예산 중심 개발협력 자원 공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원 기반의 **경협증진자금**(저양허성 차관) 및 **정책금융** 활용 강화
- EDCF와 **경협증진자금(EDPF)** 및 **정책금융** 등을 연계한 **혼합금융*** 활용도 활성화

* (예)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3호선 사업 : EDCF 243백만유로 + 정책금융 64백만유로 승인

- **지분투자·보증**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·투자 규모 확대

* 최근 5년간 개발자원을 통해 동원된 총 민간자원 규모는 1,570억불 상당으로 매년 증가 추세

□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 강화

- **중소득국의 인프라 수요** 급증에 대응하여 수원국 민자사업에 대한 **지원***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 해외진출 환경 조성

* 네팔 UT-1 수력발전 민자사업(우리기업이 투자건설·운영에 참여)에 대한 EDPF 50백만불 지원

- PPP사업 관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**PPP 사업법인에 직접투자 검토**
- ODA를 촉매로 민간의 전문성과 재원을 활용한 **전략사업 모델을 개발**하고, 타 기관(국제기구·공여국)과의 협력을 통한 **효과성 제고**

□ 공공부문의 개발금융 기능 활성화

- 개도국 지원을 위한 **민간지원수단(PSI)***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조 추세에 맞추어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한 **법·제도적 정비** 추진

* 개도국 민간부문에 대한 ODA 이외의 지원(대출·보증·지분투자 등), DAC은 '18년 ODA 통계발표('19년)부터 PSI(Private Sector Instruments) 규모 별도 발표(유·무상 ODA와 구분)

- **對개도국 경제협력 강화 및 전략적 민간투자 확대**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은 등 공공부문의 **개발금융 기능 활성화*** 방안 검토

* ▲(목적)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자원 공급을 직간접으로 확대하여 수원국 중심의 개발효과(고용 증대, 지속가능발전 등) 제고 +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▲(대상) ODA 수원국 및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국가의 민간 부문에 투자

전략 4 함께하는 ODA

1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

□ 정부-시민사회 협업 활성화

- 국제개발협력 분야 「정부-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」(21.1월) 추진을 통해 정부-시민사회간 협력 공고화
 - * ▲효과적 국제개발협력 이행 ▲투명성·책임성 제고 ▲취약층 지원 및 협력 확대 ▲개발협력 인지제고 및 국민참여 확대 추진 등
- 범정부 대화채널(정부-시민사회 정책협의회*)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, 시행기관(KOICA·EDCF) 차원의 협의 채널 활성화 및 연계 추진
 - *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본정책 이행방안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고, △과제 이행점검 △공동 평가 △평가결과 공유 등 추진
- 개발협력 분야 정책개선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및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상호 노력 확대
 - * △ODA 정보공개, △시민사회 회계 투명성, △환경·사회·인권적 악영향 예방 등 추진

□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

-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시민사회 강점 분야(인도적 지원·보건·교육 등)에 대한 협력 강화
- 현장 중심 개발협력을 위한 시민사회협력 예산* 확대 노력 지속
 - * 시민사회협력 사업 실적은 40백만불로 우리 양자 원조의 2.1% 수준('18년 기준)

□ 시민사회 프로그램 다각화

- 개도국 내 ODA 사업과 시민사회 사업* 간 연계 추진 방안 모색
 - *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해외사업(103개국 대상 2,090개 사업, 5,933억원 규모 / 2019 CSO 편람 기준)과 정부 ODA 사업 간 시너지 제고 추진
- △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, △대국민 인식 제고, △개도국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있어 정부-시민사회 협력 지속 확대
 - *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ODA와 시민사회 활동간 협력을 위한 場 마련 병행

2 국제협력 고도화

□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

- 5대 UN 중점협력기구*의 기구별 전문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강화, 국제사회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지원 확대 노력 추진
 - * WHO, UNICEF, WFP(세계식량계획), UNDP(유엔개발계획), UNHCR(유엔난민기구)
- MDB와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제 설정* 추진, 신탁기금 지원**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글로벌 협력 선도적 역할 수행
 - * MDB 연차총회·연례협의 계기,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논의 지속 및 교류 활성화
 - ** WB, ADB, IDB 등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확대 등
- 「다자협력 추진전략」(16.2월)을 개정, 주요 국제기구 협력방향* 보완, 다자사업 성과관리** 및 양자사업과의 연계 등 효율성 제고 추진
 - *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해 WHO 및 보건 전문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
 - ** ▲ MOPAN(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) 활동 참여 ▲ 국제기구 성과보고서 점검 ▲ 신규사업 추진시 평가계획 명시 등

□ 공여국과의 협력 확대

- DAC 회원국과의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, 공통 관심 분야·지역에 대한 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 등 추진*
 - * ▲ 한-美 ▲ 한-濠 ▲ 한-加 간 개발협력 MOU를 기반으로 개발협력 분야 협력방안 모색
- 원조기관 협의체 참여*를 통해 역내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, 교통인프라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공동지원 등 추진
 - *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(한(EDCF), 日(JICA), 中(수은), 태국(NEDA))과의 협력 증진

□ 협력방식 다각화

- BRICs 등 신흥공여국과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주축 국가(중소득국)와의 삼각협력* 확대**를 통해 개발 효과성 제고
 - * 공여국의 개발재원과 주축국의 역내 네트워크를 상호 활용하여 개도국을 지원하는 방식
 - ** '20년 우리 정부의 MIKTA 의장국 수임 계기, 멕시코(중남미), 인도네시아(아시아), 터키(아프리카·중동) 등 각 지역의 주축국과 연계한 삼각협력 추진
- 우리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·자문 등 지식공유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수원국과의 상생의 경제협력 토대 구축

③ 개발협력 외연 확대

□ 민간기업·재단과의 협력 강화

-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(CSR)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「기업과의 협력전략」 수립 및 정례 소통 플랫폼 마련
- 기업의 혁신적 기술 및 글로벌 사회공헌활동(CSR)과 ODA를 연계*하여 ODA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시너지 창출
 - * (예시) ▲(유상)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▲(무상) 진단키트 지원, 검사인력 역량강화 ▲(기업) 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
- 주요 공여국·국제기구별 ODA 입찰정보 조사·분석 및 유관기관(협회 등)에 제공, MDB 대상 국내 우수업체 정보제공 추진
- ODA 관련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주기적 의견수렴·지원, 국내외 민간재단과 국제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협력방안 모색·지원
 - * (예) 게이츠재단-국내 BIO기업 공동으로 개도국의 의료접근성 향상 프로젝트 기획

□ 공공기관·대학 등과의 협업

-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강점 분야를 활용한 개도국 진출 방안 모색, 국민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홍보협력* 등 추진
 - * 공익광고협의회와의 대국민 ODA 인식제고 및 캠페인 등
- 대학과의 협업*을 통한 개도국 내 유망 분야 ODA 사업 발굴·기획
 - * 대학의 연구용역 참여 및 ODA 사업수행 차원을 넘어 정부와 ODA 사업을 공동 기획·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 강구((예) 개도국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제작)
-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ODA 연구 기반 확대 및 연구결과의 개발협력 정책 반영 활성화
 - * '글로벌코리아포럼(경인사연), '개발협력연대(외교부), 'ODA시장진출위(기재부) 등 민간회의체 적극 연계

□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

- 지자체별 해외자매도시(지역)와의 교류 활동과 중앙정부·공공기관 ODA 사업 및 기업·시민사회의 활동을 상호연계하여 효율성 제고
 - * (예) 자매우호도시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의료 물품 지원 등
- 도시화 관련 문제해결 등 지자체의 행정발전 경험을 ODA에 접목·지원

1 지속성 :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

□ 전문인력 양성·활용 강화

- 국제개발협력 경험·지식의 축적 지원, 개발협력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수립
- 국내외 전문가 풀 조성·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·운영 및 국제개발협력 인력정보 시스템 구축·활용

* 초청연수·장학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 강화 추진

□ 일자리 창출·연계 제고

- 청년층의 해외진출*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 및 현지사무소 파견을 지원하고, 지역 인재 취업 경쟁력 제고 방안** 모색

* ▲국제기구 초급전문가, ▲국제금융기구 청년기술인재단, ▲다자협력전문가 파견 등

** 거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·벤처 창업 지원, 비수도권 인재양성 등

- 중장기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, 귀국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* 내실화를 통해 경력 사다리 구조 안정화

* KOICA Step-Up: 귀국 인재 대상 개발협력 분야에 특화된 단계별 경력개발 교육

- 국제기구 파견 및 해외봉사단 등 ODA 관련 경력 인정을 통한 취업 지원 및 ODA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□ 개발협력 참여 확대

- ODA 관련 국민의 다양한 참여 기회(교육, 사업, 평가 등) 부여,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지식·경험 교류 채널 조성

* ODA 관련 국민인식 제고를 통해 ODA 규모 지속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
- 대학·연구기관·학회 등의 조사·연구 활성화 지원* 등 생태계 구축, ODA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** 개발도 추진

* 민관 공동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, 해외 기관과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

** 대학 및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·청년 대상 교육 확대

2 책무성 : 성과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

□ 평가 실효성 제고

- (평가체계) 자체평가(개별사업 중심)와 위원회 평가(국가·분야 등 종합평가) 간 상호 연계를 통해 ODA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
 - 개별사업을 넘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·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평가 강화
 - 사업 성격을 고려해 자체평가 과제를 선정하고, 점진적으로 확대
- (관리역량) 평가성 사정* 등을 통해 자체평가 과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, 시행기관 평가역량 진단 후 컨설팅 제공
 - * 평가성 사정(Evaluability Assessment): 평가의 유용성·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예비평가
- (환류) 주관기관의 사업심사, 국제개발협력위의 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사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과 연계

□ 세이프가드 강화

- ODA 사업 추진 시 환경·사회 및 인권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세이프가드*에 기반한 환경·사회 및 인권 영향평가** 시행 강화
 - * 사업 쏠단계에서 환경·사회·인권적 영향에 대한 고려 의무화, 수원국의 사업요청서(PCP) 제출시 영향평가 스크리닝지 제출 의무화(20년 신규사업부터 단계적 적용 중)
 - ** 사업 시행 전 인권약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제거·최소화하기 위한 제도, 한국수출입은행과 KOICA는 인권 중심 접근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 既 도입

□ 정보공개 확대 및 투명성 제고

- 국제원조투명성기구(IATI)* 정보공개 항목 확대, ODA 정책·사업 관련 정보(평가보고서 등)에 대한 국민 접근성** 강화 및 이용편의성 제고
 - *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: ODA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 간 협의체
 - ** ODA KOREA 홈페이지 / 주요 시행기관(KOICA·EDCF) 홈페이지 등
- ODA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품질 제고, 타당성 조사 등 ODA 사업 추진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 제고

3 효율성 : ODA 추진체계 혁신

□ ODA 쏠 주기 혁신

- 'ODA 추진체계 개편방안'(국제개발협력특, '18.6월) 및 「국제개발협력 기본법」 개정('20.11 시행)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무체계 전반 근본적 개선
-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분야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전략 수립부터 사업 기획·조정 및 성과관리까지 ODA 전반 총괄·관리 강화

< 단계별 개선방향 >

- ✓ (전략 수립) 국가 ODA 비전·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별·분야별 세부전략 마련
- ✓ (사업 기획) 전략에 기반한 수원국 맞춤형 사업 및 유·무상 연계 사업 발굴
- ✓ (심사·조정) 주관기관-국제개발협력위-예산당국 간 효율적 심사체계 구축
- ✓ (점검·평가) 자체평가 품질 제고, 위원회 평가 강화, 환류 체계화 등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사업관리

□ 사업정보 관리 인프라 구축

- 'ODA 통합정보포털*'('20.5월 운영 시작)을 통해 사업 단계별 점검·관리 강화, 시행기관 간 사업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

* 사업 단계별(사업계획 → 심사 → 집행 → 평가) 관계기관 간 협력 플랫폼

- ODA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, ODA 정보 분석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축, 통계자료집 작성 및 정책·사업에 환류

□ ODA 통합성·현장성 강화

- 무상원조 분절화 완화 등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회의*(외교부) 운영 및 부처제안 사업 등 KOICA의 플랫폼 기능 강화

* 주관기관의 소관분야 정책·전략 수립, 사업 심사조정, 사업 관리(이행점검 및 지원) 강화

- 재외공관 및 현지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사업주체 간 협력체계 개선,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

□ ODA 홍보 체계화

- 공공외교와 연계하여 수원국 상황을 반영한 효과적 메시지 관리, 통합 홍보 기획기능 강화 및 시행기관 간 홍보 연계 실시

IV. 제3차 국제개발협력 자원배분 방향

△4대 전략목표 및 △12대 중점과제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ODA 자원 운용 목표 및 유형별·분야별 배분 방향 설정

1 자원 규모 및 유형별 구성

1 자원 규모

❖ ODA 총 규모를 '19년 대비 '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

- 2차 기본계획에서는 'ODA/GNI 비율'을 지표로 활용하였으나, 동 비율은 GNI(국민총소득)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계가 존재
 - 3차 기본계획은 ODA 자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'ODA 규모'를 지표로 설정
-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여건이 양호하지는 않으나, 중견 공여국으로서 책무 및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* 등 감안 ODA 규모 확대 기조 유지
 - * '19년 대비 '30년까지 ODA 규모 2배 이상 확대(오사카 G20 정상회의, '19.6)
 -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가 종료되는 '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'19년(3.2조원)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 추진

2 양자·다자 비율

❖ 국제동향 및 대외정책 등과 연계하여 탄력적 운영

- 수원국 수요에 따른 양자협력의 가변성이 큰 특징*을 고려할 때, 양자·다자 비율 목표치를 설정·운영하는 것은 실행력 낮음
 - * 양자 ODA 비중(%) : ('16) 79.9 → ('17) 80.7 → ('18) 78.3 → ('19) 77.9 → ('20) 81.0
 - 양자·다자 ODA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, 국제사회 요구 및 정부 대외전략 등과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운영

3 유상·무상 및 비구속성 비율

❖ (유상:무상) 40:60 원칙, (비구속성 비율) 유상 60%, 무상 95% 이상

- (유상·무상 비율) 단일 목표치를 설정·운영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저하
 - 2차 기본계획 목표인 유상:무상 비율(인정액 기준) 40:60 유지를 원칙으로, 매년 일정 범위 내(37~43 : 63~57)에서 탄력적으로 조정*
 - * ODA 환경, 정부 정책기조, 사업 집행실적 등과 연계하여 조정, 시행계획에 반영
- (비구속성 비율) OECD DAC 및 수원국, 시민사회 등에서 비구속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ODA의 비구속화 강화
 - '2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유상 60%, 무상 95% 이상으로 확대 추진
 - * 최근 5년('15~'19년)간 비구속성 비율(평균) : (유상) 46.5%, (무상) 86.4%

2 지역별 배분 방향

❖ 중점협력국 조정(24→27개국) 및 양자 ODA 재원의 70% 이상 투입

- (대륙별 배분) 정부 대외정책*과의 정합성, 보건·위생·교통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** 기조 유지
 - * 「포스트 코로나 시대, 신북방정책 전략과 국가별 협력방안」(20.6월), 「신남방정책 플러스」(20.11월), 「'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」(21.1월) 등
 - ** ODA 비중(% , '20년) : 아시아 39.4 아프리카 17.9, 중남미 6.3, 중동·CIS 4.9 順
 - 중남미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사업 다변화
- (중점협력국) 수원국 발전수준, 경제·외교협력 실적 및 전망 등을 토대로 중점협력대상국 재선정, 양자 ODA 재원의 70% 이상 투입
 - 협력 성과와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·신북방 국가 등을 추가하고, 선택과 집중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륙별 거점 국가 지정·운용
 - 중점협력대상 국가별로 중점추진 분야 및 이행계획 등을 포함한 중기지원전략 수립, 전략·사업 간 연계를 위한 연도별 지침 마련

3

소득그룹별 배분 방향

❖ 최저개발국 및 하위중소득국 지원 확대,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

- 국제사회 지원 추세에 맞게 개발 재원이 가장 필요한 최저개발국 및 하위중소득국에 대한 ODA 지원 확대

* ▲최저개발국: 1인당 GNI \$1,005 이하, ▲하위중소득국: 1인당 GNI \$1,006 ~ \$3,955

- 수원국 발전단계(소득수준 등)에 따른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 차별화

< 소득그룹별 협력 방향 >

- ✓ (최저개발국)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·교육·위생 등 기초인프라 및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통·에너지 분야 중점 지원
- ✓ (하위중소득국)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개발수요를 지원하고, 민자사업 연계 지원 및 복합금융 패키지를 통한 대규모 유상사업 지원 확대
- ✓ (상위중소득국) 구속성 원조가 제한됨에 따라 비구속성 차관 시범사업 국가 선정 및 실시와 더불어 MDB 협조융자 및 경험증진자금과의 연계 활성화

4

분야별 배분 방향

❖ △'22년까지 보건분야 중점 지원, △그린·디지털·공공행정 ODA 확대, △시민사회 협력 ODA 예산 비중 확대 노력

- 개도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'22년까지 보건·의료 분야 지원 대폭 확대('21년 3,358억원, 전년대비 21% 증액)
 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ODA, ICT·공공행정 등 비교우위 분야 ODA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
- 분야별 세부전략 수립 및 유망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실행력 확보

V. 향후 계획

- 제3차 종합기본계획 국회보고 및 공개
 -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제3차 종합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, ODA KOREA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
-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
 - 제3차 종합기본계획의 비전, 4대 전략목표 및 12대 중점과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기획·발굴
 - 연도별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시행계획 수립
-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자원배분계획 수립
 - 제3차 종합기본계획의 자원배분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 ODA 자원 규모 및 지역별·분야별 운용계획 수립
 - 연도별 자원배분계획에 따른 사업·예산 조정 결과를 종합시행 계획(요구액 기준)에 반영, 국개위 의결 후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
- 국제개발협력 세부추진전략 수립
 - 제3차 종합기본계획의 지역별·분야별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는 전략 및 대외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전략 수립
 - 지역별(아시아·아프리카 등) 및 분야별(ICT·인력양성 등) 전략 수립, 핵심대외정책(신남방·신북방 등) 성과제고를 위한 세부전략 수립
- '21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 수립
 -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'21년도 평가계획에 반영해 평가 실시